

동향

자살관련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인터넷확산의 역기능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역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자살사이트’이다. ‘자살사이트’는 자살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를 악용·남용하여 자살을 유도·미화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동으로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자살사이트를 통한 자살의 형태는 매우 정형적인데, 인터넷을 통해 낯선 사람과 동반자살협정을 맺은 후, 치밀하게 계획한 바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휴가나 데이트 상대를 구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동반자살할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구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뛰어 내리는 것이 제일 좋은지, 또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중 어느 것이 가장 치명적인지 등 자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목매달기·약물사용 등의 자살방법, 자살도구, 자살사유, 자살실패담 및 경험담, 유품경매, 동반자살 구인, 체험공유, 자살사이트 소재안내 등이다.

국가별 자살율은 동구권, 북구권 쪽이 높고, 인구 10만명당 20여명이다. 반면에 아일랜드나 뉴질랜드는 아주 낮아서 10만 명당 6명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UN 조사에 의하면 일본, 불란서 보다는 오히려 높아서 세계 6위를 점하고 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또는 혼자서는 쉽게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및 단체행동을 통해 쉽게 자살을 감행한다는 사실이다.

2. 자살관련사이트의 현황

2000년 4월부터 국내 자살사이트가 홈페이지, 동호회 등의 형식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12월부터 자살사이트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대개 홈페이지 또는 동호회(커뮤니티, 클럽 등)이며 최근에는 철저한 회원제 중심의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용실태는 동호회의 경우 회원수가 2명에서 2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중 3명이 자살사이트 접속경험(34%)이 있으며, 접속자 중 34%가 실제 자살을 계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접속 동기로는 호기심(71%), 자살방법을 알기 위해(18%), 자살동반자를 찾기 위해(8%)로 조사되었다(2002.7.8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2002.1~6월, 전국 초·중·고생 2807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발표).

2000년 12월 인터넷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용자들이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투신자살, 촉탁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3년 6월 인터넷자살사이트 내에서 조직적으로 판매되는 자살용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20대 두 남자가 자살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자살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안티자살사이트가 개설되어, 고민을 상담해 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표방하고 있는 목적과는 다른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123건을 심의하여, 이 중 104건에 대해 경고, 내용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후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후 시정요구가 잠시 정지되었다가,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어 다시 자살관련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가 행해지고 있다.

자살사이트와 관련된 또 다른 것으로는 살인청부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살인범죄 실행에 관한 정보, 청부 유형별 가격, 경비 지급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이메일을 통해 살인청부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2월 국내에 처음 개설되어,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까지 국내 유명포털사이트에 살인청부인터넷 동호회가 10여개 개설되었다. 2002년 7월 처음으로 9건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용자해지방 법을 통해 살인청부사이트를 폐쇄 조치하였다.

3. 자살관련 사이트의 폐쇄여부 논란

자살사이트의 폐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자살로 이끄는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폐쇄가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동과학을 전공한 National Defense Medical College Research Institute의 요시토모 다카하시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당국은 인터넷사이트상의 자살방조사이트를 발본색원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자살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살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이트보다는 동반자살할 파트너를 구하고 자살방법을 유포시키는 인터넷사이트 수가 더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전자통신을 감독하는 일본 통신성의 카즈다카 나카미조 대변인은, 특정한 자살과 인터넷사이트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수가 잠재적인 자살희망자를 설득시켜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이들 사이트 모두를 폐쇄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자살에 대한 실제 공범행위만이 불법이므로, 일본경찰청은 인터넷관련 사이트에 관련된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사이트는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는 정도가 심각한 일부 자살관련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에게 즉각 이용해지를 통해 폐쇄하도록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이 직접 폐쇄 등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건의하고 있다. 윤리위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한편, 해외 자살사이트를 통한 자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국내에는 자살이란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10여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가 60여개 있었으나 일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자진폐쇄 또는 서비스를 중지했다.

4. 시사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주는 순기능도 크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해 및 불법정보가 범람하게 되는 등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 사이버 공간이 제2의 생활공간이 되면서 주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통로가 되면서, 이의 중요성 못지 않게 역기능 또한 비례하여 증가된 것이다.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인 개방성과 확장성, 익명성 등을 고려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범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음란·폭력물 등 불법 및 유해정보의 유통, 인권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으로 인해 강도 높게 규제되어 온 반면에, 인터넷은 비밀성과 비닉성을 전제로 하는 통신의 성격과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규제의 강도가 약했다. 즉 통신이라는 매체는 일대일이라는 매체도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용규제 보다는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신산업이라는 자연독점적 산업이 신규의 진입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쟁을 도입하고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집중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도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 만큼, 공공성의 차원에서 좀더 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내용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행위를 야기시킬 만한 우려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같은 적법절차를 밟아 폐쇄조치 등을 통해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터넷문화교육 등 건전한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인터넷관련 사업에 대해, 교육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건전한 인터넷문화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일보, 자살사이트관련기사, 2003. 6. 10.
- [2] 한겨레, 자살사이트 80개 폐쇄, 2002. 5. 24.
- [3] 정보통신윤리백서,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4]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5]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 [6] “Japanese officials worry about strangers arranging suicide pacts via the Web”, USA TODAY, 2003. 7. 7.

(주지홍 책임연구원, 570-4380, jjoo@kisdi.re.kr)